



주간통일정세 2011-17(2011.04.18~04.24)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1-17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 주민 통제체제 이완..달러 의존 심화(4/20, 조선중앙통신)**
 -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경제난과 화폐개혁 실패 등으로 북한 내 주민통제 시스템이 이완되고 달러 환전상이 등장하는 등 달러화 의존도가 심화함.
 - 뇌물을 비롯한 부정한 방법으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증명서 없이 무단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잦으며, 무단 이동을 하다가 단속돼도 돈만 주면 무마되는 것으로 전해짐.
 - 20~40세대 단위로 운영되는 인민반 회의도 기능이 약화하고 있어서 인민반장에게 뇌물을 주고 인민반 불참을 무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인민반장들의 공안기관에 대한 주민동향 보고 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알려짐.
 - 북한 당국은 대책으로 공민증 교체를 추진하고, 매주 한 차례 열던 인민반 회의를 주 2회로 늘리고, 보안원을 증원해 말단조직까지 보위보안원을 파견하는 등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음.
 - 주민 이탈이 심한 국경지역은 김정은의 특별지시로 3세대씩 조를 나눠 서로 감시, 신고토록 하는 한편, 세대별 행방불명자를 조사하고 숙박업소에 대한 검열도 강화하는 것으로 전해짐.
 - 또한 화폐개혁 실패로 달러화 의존도가 극심해지고 있어 장마당(시장) 상인들은 고가의 전자제품은 물론 두부 등 식료품과 일용잡화를 거래할 때도 외화를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 소액 달러 수요가 급증해 1달러, 5달러, 10달러 등 소액권 품귀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고, 고리의 환전수수료를 챙기는 소액권 전문 환전상까지 등장함.
 - 북한 당국은 화폐유통법, 외화관리법 등을 통해 주민의 직접적인 외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외화환수 조치를 하고 있음.

- **김정일, 김책제철 녀 달여 만에 또 현지지도(4/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북한의 대표적 철강공장인 김책제철연합기업소를 4개월여 만에 찾아 자력갱생을 재차 강조했다고 보도
 - 중앙통신은 "김정일동지께서 기업소의 당원과 근로자들이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 철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고 하셨습니다"고 전함.
 - 중앙통신은 이어 "(김정일 동지가) 이 자랑스런 성과는 자력갱생이야말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키는 열쇠이며 우리 민족을 영원히 승리와 번영의 한길로 이끌어주는 필승의 보검이라는 것을 똑똑히 실증해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강조

- 또 "김정일 동지께서 김철에서 지난해에는 우리식 용광로에 의한 주체 철생산체계를 완성하더니 올해는 남의 나라에 의존하던 중유강편생산 체계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의 연료에 의거하는 새로운 강편생산체계를 확립했다고 하시며 관련 부문 일꾼 등에게 감사를 주셨다"고 전함.
- 김 위원장은 빵과 과자, 콩우유 등을 만드는 함경북도의 수성천종합식료공장도 현지지도 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김정일 해산청년광산 시찰...광물생산 독려(4/2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양강도의 해산청년광산을 현지지도하고 광물생산 증대를 독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 광산의 당면 과업은 광물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기술개선사업을 짧은 기간에 끝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며 "고품질광석이 많이 매장돼 있는 해산청년광산은 유리한 채굴조건을 가진 만큼 총역량을 집중해 굴지의 유색금속 생산기지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함.
- 이어 "(김 위원장은) 유색금속은 나라의 부강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귀중한 자원인 만큼 한 덩어리라도 모조리 이용해야 한다며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심층채굴대책도 면밀히 세워나가기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임.
- 이번 현지지도에는 김기남 당비서와 김정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태종수 당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현철해 국방위 국장이 수행했으며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수행단에서 빠짐.

● 김정일 성진제강 시찰...자력갱생 재차 강조(4/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북도 김책시의 성진제강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 해 "금속공업의 주체화가 빛나게 실현된 것은 우리 공업역사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특대형의 사변이 된다고 하시며 주체화는 우리 경제의 절대불변의 진로라고 말씀하셨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또 "(김정일동지가) 기업소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와 봉쇄책동 속에서도 철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당의 전통적 구호인 자력갱생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승리와 번영으로 이끌어주는 필승의 보검이라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강조
- 이어 "김일성조선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중대한 국면에 들어섰다고 하시며 수령님의 탄생 100돌을 김일성민족의 최상최대의 명절로, 인류사적 대경사로 맞이하자고 다시금 뜨겁게 호소하셨다"고 덧붙임.



- 북한은 2009년 말 성진제강에서 주체철 생산체계를 확립했다고 선전하고 있으며 당시 김 위원장은 성진제강을 찾아 "자체의 기술로 주체철 제강법을 완성한 것은 3차 핵 시험 성공보다 더 위대한 승리"라고 치하
- 이번 성진제강 시찰에는 김기남 비서와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태종수 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현철해 국방위원회 국장이 동행

● **김정일 · 정은,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4/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동행하고 함흥 룡성기계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김 위원장의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 보도는 지난 1월30일 이후 3개월 만으로 전날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김정은을 대동하지 않고 함경북도 김책시의 성진제강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 했다고 전함.
- 김 위원장은 이날 기업소를 돌아보고 "땅속에 있는 지열수를 이용해 건축물의 난방 및 냉방을 보장하면 전기와 석탄을 비롯한 동력과 연료를 절약하면서 사람들에게 편리한 생활조건을 제공하고 문명화를 실현하는 데 큰 의의를 가진다"며 "지열수를 이용해 그 덕을 크게 보자면 룡성기계연합기업소를 비롯한 공장, 기업소에게 지열설비생산을 급격히 늘려야 한다"고 강조
- 김 위원장은 또 "에너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급격히 늘어나고 화석연료자원이 빠른 속도로 고갈돼가고 있어 새 에너지의 한 형태인 지열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이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우리나라에는 지열수를 적극 개발 · 이용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빠른 발전을 추동하고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

■ **김정일 동향**

- 김정일,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 지원자들에게 감사 전달(4.20, 중방)
- 김정일, 김책제철연합기업소 · 수성천종합식료공장 현지지도(4.21, 중통)
- 김정일, 혜산청년광산 현지지도(4.22, 중통 · 중 · 평방)
- 김정일, 쿠바공산당 제6차대회 진행 및 쿠바공산당 중앙위 제1비서로 선출된 '라울 카스트로'에게 4.19 축전(4.21, 중통 · 중방)
- 김정일, 성진제강연합기업소 현지지도(4.23, 중통)
- 김정일,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4.24, 중통)



나. 경제

● 北 3월에 4곳서 구제역 추가발생(4/20, 미국의소리(VOA))

- 지난달 북한의 황해북도와 강원도 4개 지역에서 300마리에 가까운 소·돼지가 구제역에 추가로 감염됐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전함.
- 북한이 지난 18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3월2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황해북도의 상원군, 신평군, 황주군과 강원도 금강군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해 돼지 270마리와 소 22마리 등 총 298마리가 감염됐고 이 중 141마리는 폐사함.
- 북한은 이 보고서를 통해 "구제역이 어떤 경로로 전염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다"며 "현재 구제역 발생지역을 차단하고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 앞서 북한은 2월7일 구제역 발생 사실을 OIE에 알렸고 2월21일 제출한 첫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18일 평안북도 태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올해 1월 말까지 135개 농장에서 돼지 1만267마리와 소 1천135마리가 구제역에 감염됐다"고 밝힌 바 있음.

● 北도시가구 60%, 협동농장 친척에 식량요청(4/20, 연합뉴스)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 등의 북한 현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기구가 인터뷰한 현지 도시가구 중 60%가 최근 6개월간 농촌 협동농장의 친척에게 식량 확보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FP 등은 2월21일부터 3월11일까지 북한 농촌과 도시 지역의 122개 가구를 방문, 식량사정과 관련해 주민을 인터뷰하고 지난달 보고서를 작성함.
- 보고서는 이런 도움이 주로 5~6월과 10~12월에 이뤄졌으며, 조사단이 인터뷰하기 한 주 전 이내에 도움을 받은 가구는 20%에 불과했다고 전함.
- 보고서는 "협동농장의 가정은 텃밭을 가꾸거나 가축을 길러 부가적으로 식량을 마련할 수 있다"며 "(북한의 도시주민이) 협동농장의 친척에게 식량을 구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생존수단"이라고 설명
- 2천400만 명에 달하는 북한 인구 가운데 30%는 협동농장에서 일하며 나머지는 배급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임.
- 보고서는 또한 인터뷰에 응한 가구의 3분의 2는 1주일에 최소한 하루는 식사량을 줄이고 있다고 답했고, 4분의 1은 매일 식사량을 줄이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약 40%의 가구에서는 음식을 조리할 때 양을 늘리려고 매일 물을 더 넣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함.



다. 군사

● 北, 대사관·기업 통해 核자재 밀수 계속(4/18, 교도통신)

-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북한 우리늄농축과 관련해 지난 1월 작성한 보고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려고 대사관이나 명목상의 기업을 이용해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자재와 무기를 계속 밀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 보고서는 밀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및 개인에 관한 정보제공을 유엔 회원국에 요청, 제재 대상을 확대해 이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면서 추가 검토 대상으로 개인으로는 조선노동당 박도춘 군수 공업담당 서기, 영변에 있는 원자력연구소의 리상근 소장을 듬.
- 보고서는 또한 북한의 우리늄 농축은 '주로 군사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미국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에게 보여준 영변의 우리늄농축시설을 저농축용에서 전환하면 '1년에 핵무기 1~2개분'의 고농축 우리늄 제조가 가능하다고 지적
- 보고서에 따르면 제재대상인 8개 기업은 핵 관련 기기와 자재 입수를 위해 복수의 관련 기업을 이용했는데, 이 가운데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와, 제재를 피하려고 관련 업무를 이관한 그린파인어소시에이티드는 다수의 가짜 이름을 이용해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
- 교도통신은 해외의 대사관과 대표부를 경유해 세관 검사를 면제받는 '외교무역'을 활용한 밀수도 이뤄졌다고 전함.
- 보고서는 1990년대 파키스탄 '핵개발의 아버지'로 불린 압둘 카디르 칸 박사 측으로부터 초기형 원심 분리기를 입수, 관련된 훈련을 받았던 것 외에 선진국의 연구기관으로부터 핵 관련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도 언급
-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월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북한 우리늄 농축 프로그램(UEP)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 측의 강력한 반대로 보고서의 공개 및 채택은 이뤄지지 못함.

● 北, 원산 인근 산 속에 공군기지 건설(4/19, 월스트리트저널(WSJ))

- 북한이 동부 해안도시인 원산 인근 산속에 공군기지를 건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 커티스 멜빈의 위성사진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
- WSJ는 이날 인터넷판 코리아 리얼타임 코너에서 커티스 멜빈이 지난주 산을 가로지르는 활주로를 추정되는 군 비행장 모습을 공개했다면서 이 기지는 원산에 근접해 있으며 평양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와도 멀지 않은 곳에 건설되고 있다고 전함.
- 하지만 골짜기 깊은 곳에 있어 고속도로에서 이 기지를 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덧붙임.



- **북한군 인트라넷에 광케이블망 설치(4/23,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현대전 수행에 대비해 군 내부의 인트라넷에 광케이블망을 설치하는 등 전산망 체계 현대화에 나섰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RFA는 북한 국경지역의 군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평양의 인민무력부에서 각 군단과 훈련소 지휘부까지 연결된 전산망이 초고속 전용선으로 교체됐다"고 전함.
 - 소식통은 "군부에서 '현대전은 전자전'이라면서 신속한 군 통신과 대용량 전송을 위해 빛섬유(광케이블)로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유사시의 공습을 우려해 빛섬유 선로는 모두 땅에 묻었고 매설작업도 야간에 진행됐다"고 RFA에 말함.
 - RFA는 김홍광 NK지식인연대 대표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1990년 말부터 '광명'을 비롯해 4개의 인트라넷을 구축했고 이 중 군부가 전용하는 내선을 '금별'로 불렀으며 2004년 정도부터는 인트라넷이 광케이블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전하기도 함.
 - RFA는 중국 선양의 대북 무역업자를 인용해 유엔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강성무역회사 등 북한군 산하의 무역회사들이 일반회사로 가장해 광케이블과 컴퓨터 등을 밀반입하고 있다고 덧붙임.

- **北김영춘 "언제 전쟁 터질지 모르는 긴장상태"(4/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건군절'(인민군 창건일, 4·25) 79주년을 하루 앞두고 이날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 보고를 통해 "지금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며 "우리 군대는 빈말을 하지 않으며 백두산 총대는 자비를 모른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김 부장은 "우리 인민군대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호전광들의 날로 무모해지는 도발책동에 대처해 이미 자기의 원칙적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며 "끝끝내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혁명무력은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진 막강한 위력을 총폭발시켜 침략자들을 일격에 격멸소탕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 것"이라고 말함.
 - 그는 또 "모든 장병이 수령결사옹위를 최대의 사명으로 간직하고 당과 수령을 위해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싸우는 것이 조선인민군대만이 지닌 가장 숭고한 사상정신적 풍모"라며 "조선인민군이 백전백승하는 근본요인은 최고사령관과 장병이 혼연일체를 이루고 전국이 하나의 선군혁명동지가 된 것"이라고 함.

라. 사회·문화

- **北 50명 중 1명 휴대전화 사용...(4/19, 연합뉴스)**
 - 북한 인구의 2%에 해당하는 43만 여명이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평양이



- 외 지역에서도 휴대전화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등 북한 주민의 휴대전화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북한 내 유일한 휴대전화 사업자인 이집트 '오라스콤 텔레콤'이 19일 내놓은 '2010년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오라스콤 텔레콤이 북한의 체신성과 협력해 세운 휴대전화 업체 '고려링크'에 가입한 이는 지난해 12월 현재 43만1천919명으로 2009년 12월 9만1천704명의 4.7배로 늘었고 매출액도 급증해 지난해는 전 년 동기보다 156% 늘어난 6천640만 달러에 달함.
 - 오라스콤 텔레콤은 "2분기에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제를 내놓은 결과 지난 9월에는 평양 외 지역 매출이 전체매출의 50% 가까이 차지했다"고 설명
 - 보고서는 또한 "3분기에는 특히 젊은 층의 수요가 있어 영상통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용률이 높아 2011년에는 획기적인 부가가치서비스(VAS)를 더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힘.
 - 오라스콤 텔레콤과 협력해 만든 고려링크는 현재 평양에 18개, 평양 외 대도시에 8개의 지점을 두고 있으며 평양 외에도 원산, 함흥, 평성, 안주, 개천, 남포, 사리원, 해주 등 14개 도시와 22개 고속도로를 관장하는 333개의 이동통신 기지국이 있음.

■ 기타 (사회문화)

- 제2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폐막식,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부위원장)·강능수(내각 부총리)·안동춘(축전조직위원회 위원장·문화상/폐막사)·량만길(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참가자 류경정 주영체육관에서 진행(4.18, 중통·평방)

2. 대외정세

- 北 "반테러 목적 국가침공 목인 안돼"(4/18,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11일 열린 국제테러 유엔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대표가 "어떤 경우에도 반테러전의 미명하에 주권국가들을 무력 침공하는 행위들이 목인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중앙통신은 북한대표가 "미국의 중동지역 주권국가에 대한 무력침공과 민간인 대량살육은 국가테러와 인권유린행위의 대표적 실례"라며 "현재 작성 중인 국제테러에 관한 포괄협약에 국가군대에 의한 테러를 막기 위한 방도가 밝혀져야 한다"고 연설했다고 전함.
 - 북한대표는 또 "공화국 정부는 온갖 형태의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떤 지원도 견결히 반대하는 시종일관한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며 "공화국은 앞으로도 모든 형태의 테러를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평화롭고 번영



하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함.

- 조선중앙방송은 같은 소식을 보도하며 "(미국의 중동 침공은)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보복의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며 "이런 현상을 시급히 근절하지 않고서는 반테러투쟁이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강조

● **北, 라선 방문 일본인 2명 구속(4/20, 아사히신문)**

- 북한 당국이 지난달 라선을 방문한 일본인 3명을 구속했다가 한 명을 석방하고, 2명을 현재까지 구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
-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인 3명은 도쿄에 본사가 있는 기계 관리업체 사원으로, 라선의 식품업체로부터 기계 점검 의뢰를 받고 3월 초순 경제특구인 라선에 있는 공장을 방문함.
- 구속된 일본인들은 라선의 공장에서 가공한 중국 수출 통조림에 마약 분말을 숨겨 넣은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전해짐.
- 북한 당국은 거액의 보석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본 정부는 북한이 마약 밀수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정치외교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기로 함.

● **北 태권도 시범단 5월말 미국 순회공연(4/20, 미국의소리(VOA))**

- 경제대표단 방미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방북 등으로 북미 간 민간 교류의 물꼬가 트인 가운데 북한의 태권도 시범단이 다음 달 말부터 6월 초까지 미국 순회공연에 나선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
- VOA에 따르면 북한 태권도시범단의 방미를 추진해온 정우진 미국 '태권도타임스'대표는 "지난 15일 미 국무부에서 북한 시범단의 입국을 위한 비자가 발급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함.
- 한 태권도 시범단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2007년에 이어 두 번째이며 도시를 돌며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학교 등을 찾아가 일반인에게 태권도를 가르칠 예정으로 알려짐.
- 북한은 9월 평양에서 열기로 한 제2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미국의 태권도 인사들도 이미 초청했다고 VOA는 전함.
- 북한은 9월 대회를 앞두고 평양의 체육촌인 청춘거리에 태권도 역사박물관과 훈련센터 등을 갖춘 '태권도 성지'를 조성 중

● **"北대동강맥주 대미수출 허가 유효"(4/22, 미국의소리(VOA))**

- 미국 정부의 새 대북행정명령 발효로 북한 '대동강맥주'의 대미수출이 무산될 수 있다는 예측에 대해 미국 국무부 당국자가 "대동강맥주의 미국 수입 허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보도
- 이 당국자는 "북한 제품에 대한 수입 허가를 이미 받아 수입절차를 시작한 개인이나 업체들은 해당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



의 새로운 행정명령은 과거 미국 정부가 승인한 어떠한 북한 제품의 수입 허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

- 대동강맥주의 미국 수입을 추진해온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의 스티브 박(한국명 박일우)씨는 앞서 "새 행정명령과 관련해 일단 수입절차를 보류 하겠다"며 "상황을 관망하면서 해당 기관과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보겠다"고 말함.

3. 대남정세

● 北 "표류 주민 31명 南이 강제납치"(4/19, 조선중앙통신)

- 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적십자회는 '표류된 주민들에 대한 남조선괴뢰 패당의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만행을 규탄 단죄 한다'는 제목의 진상공개장을 통해 "기상악화로 표류하던 우리 배와 주민들을 강제 납치해 억류하고 귀순공작에 매달려 일부는 끝내 송환하지 않았다"며 지난 2월 초 있었던 북한 주민 31명의 표류를 남측의 강제납치라고 주장
- 진상공개장은 배가 표류했을 때 한국 해군 고속단정이 나타나 주민들을 구타하고 총으로 위협하며 강제로 남측으로 끌고 내려갔고, 감방 같은 곳에 넣어 위협과 공갈을 일삼으며 귀순을 시도했다고 주장
- 또 귀순한 4명에 대해 "사회정치적 환경으로 보나 가정적으로 보나 공화국을 배반하고 가족을 버릴 이유가 없는 주민들"이라며 "4명의 가족 중에는 처자들을 애타게 기다리다 사망한 사람도 있고 실신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다"고 전하기도 함.
- 북한은 3월 초 귀순자 4명의 의사 확인을 위해 대면을 요구했다가 남측이 거절하자 "대면 확인을 못하겠다는 것은 귀순의사 표시가 날조이며 유인 납치라는 것을 말해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

● 北, 4·19 맞아 南에 반정부 투쟁 선동(4/19, 노동신문; 민주조선)

- 북한 매체들은 19일 51주년을 맞은 4.19 혁명을 '반미 반파쇼 항쟁'으로 규정하고 남한 사회에 반정부 투쟁을 선동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자주, 민주, 통일의지를 과시한 4월 인민봉기'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4월 인민봉기는 해방 후 15년 동안 쌓였던 남조선 인민들의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었고 남조선 전역에서 수 백만 명에 이르는 군중이 참가한 대중적인 반미반파쇼항쟁이었다"고 주장
- 논설은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도 남조선 인민들의 염원인 자주 민주 통일을 반대하면서 북남관계 개선의 앞길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며 "현실은 우리 겨레로 하여금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그와 결탁한 반역책동을 짓부수기 위한 투쟁을 더 과감히 벌여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임.
-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도 '4.19정신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는 제목의



논설에서 "오늘의 남조선 현실은 제2의 4.19를 요구하고 있다"며 "진보 세력은 단결의 가치를 더 높이 들고 보수패당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 조직적으로, 대중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선동

● 北 '귀순자 송환협약' 적십자접촉 제의(4/22, 연합뉴스)

-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북측 조선적십자회가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귀순자 4명의 대면확인 및 송환문제를 협의할 적십자 실무접촉을 하자는 내용의 전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북측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에도 같은 취지의 전통문을 보내 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의한바 있음.
- 천 대변인은 "북측이 주장하는 대면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며 인도주의와 자유의사에 따라 귀순을 결정한 4명의 송환문제를 협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북측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
- 천 대변인은 다만 "귀순자 4명의 자유의사를 우리 측 지역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시켜 줄 용의가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
- 2월5일 어선을 타고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통해 남하했던 31명 가운데 귀순자 4명을 제외한 27명은 표류 50일 만인 지난달 27일 오후 서해를 통해 북측으로 송환됨.

● 北, 대북전단 살포에 "전면사격" 또 위협(4/22, 조선중앙통신)

- 남북 장령급(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이 대북전단 살포지역에 대해 '전면격파사격'을 가하겠다는 통지문을 남측에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지문은 "빠라살포 행위는 심리전의 한 형태이고 그것은 곧 교전상대방에 대한 숨길 수 없는 전쟁도발 행위"라며 "빠라살포 지역에 대한 직접조건격파사격은 교전일방인 우리 군대가 정전협정 파기자에게 가하는 정정당당한 징벌"이라고 주장
- 이어 "더욱이 우리 군대의 대응이 두려워 남측이 교활한 방법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빠라살포 행위에 매달리는 조건에서 우리 군대는 이미 선포한 조건격파사격 범위를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지역에 가하는 전면격파사격으로 넓히게 된다는 것을 정식으로 통고 한다"고 강조
- 또 "남측의 무모한 반공화국 대결망동은 우리 군대의 예측할 수 없는 무자비한 징벌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 시킨다"고 덧붙임.
- 북한은 앞서 2월27일에도 임진각 등 심리전 발원지를 조준사격 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작년 5월24일에도 이명박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로 심리전 재개 방침이 발표되자 화성기 등을 조준사격 하겠다고 위협한바 있음.



- **北 조평통 "南 외면시 대화 연연 않겠다"(4/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가 비망록을 통해 "남측이 끝까지 외면한다면 우리는 대화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힘.
 - 조평통 서기국이 낸 비망록은 "남조선보수당국이 우리의 대화노력을 오관하지 말아야 하며 반대화, 반통일책동의 엄중한 후과(결과)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이같이 위협
 - 비망록은 "우리(북측)는 시종일관 북남대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남조선 보수당국은 대화를 거부하고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었다"며 "(남측이) 갖가지 모략 날조된 사건까지 걸고들면서 사과와 진정성을 운운하며 대화를 기피하고 있다"며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도발에 북측의 책임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
 - 또 이명박 정부 들어 시도된 남북 간 접촉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지난 3월말과 4월 중순 두 차례 열린 백두산화산 공동연구를 위한 실무접촉에 대해서도 남조선 당국은 머리조차 내밀지 않고 아무 실권과 책임도 없는 민간인들을 내세워 자료타령이나 하며 매우 무성의하게 대했다"고 주장
 - 비망록은 남북의 민간교류마저 완전히 끊겼다면서 "괴뢰패당의 대화거부, 파탄책동으로 북남관계는 흑심하게 파괴되고 전쟁위험은 극도에 이르렀다"며 "돌이켜보면 과거 군사파쇼 정권 시기에도 북남대화는 이어져왔다"고 비난

■ 기타 (대남)

- 南 당국의 "동쪽대결과 북침전쟁 책동(‘독수리’합동연습, 최근 我軍 훈련, 무인정찰기도입 등 무력증강 계획 등)으로 조선반도 정세격화와 핵전쟁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비난(4.20, 중통·노동신문·평방)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대사관기업 통해 核자재 밀수 계속"(4/18)

-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려고 대사관이나 명목상의 기업을 이용해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자재와 무기를 계속 밀수하고 있다고 유엔 보고서가 지적했음.
- 교도통신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북한 우리늄농축과 관련해 지난 1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고 미국 뉴욕발로 17일 보도했음.
- 교도통신이 입수한 21쪽짜리 보고서는 밀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및 개인에 관한 정보제공을 유엔 회원국에 요청, 제재 대상을 확대해 이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음.
- 추가 검토 대상으로 개인으로는 조선노동당 박도춘 군수 공업담당 서기, 영변에 있는 원자력연구소의 리상근 소장을 들었음.
- 보고서는 또한 북한의 우리늄 농축은 '주로 군사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미국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에게 보여준 영변의 우리늄농축시설을 저농축용에서 전환하면 '1년에 핵무기 1~2개분'의 고농축 우리늄 제조가 가능하다고 지적했음.
- 보고서에 따르면 제재대상인 8개 기업은 핵 관련 기기와 자재 입수를 위해 복수의 관련 기업을 이용했음.
- 이 가운데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와, 제재를 피하려고 관련 업무를 이관한 그린파인어소시에이티드는 다수의 가짜 이름을 이용해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
- 교도통신은 해외의 대사관과 대표부를 경유해 세관 검사를 면제받는 '외교무역'을 활용한 밀수도 이뤄졌다고 전했다.
- 북한의 상공회의소가 외국 민간 기업에 순도 최상의 흑연 정제사업 제휴를 제안했다가 거부된 사례도 있음. 해외 범죄조직과의 연대도 지적됐음.
- 보고서는 1990년대 파키스탄 '핵개발의 아버지'로 불린 압둘 카디르 칸 박사 측으로부터 초기형 원심 분리기를 입수, 관련된 훈련을 받았던 것 외에 선진국의 연구기관으로부터 핵 관련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도 언급했음.
-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월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북한 우리늄 농축 프로그램(UEP)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 측의 강력한 반대로 보고서의 공개 및 채택은 이뤄



지지 못했음.

-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11월 75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유엔 제재조치에도 북한이 연간 1억 달러 상당의 재래식 무기와 핵 관련 기술 등을 해외에 수출했다고 밝힌 바 있음.

● <천안함연평도' 사과, 한미 온도차 있나>(4/19)

-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와 6자회담 재개 흐름의 연계 여부를 놓고 한미 간에 미묘한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음.
-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천안함연평도'를 덮고 넘어가지 않고는 대화 진전이 어렵다"며 '책임 있는 조치'에 방점을 찍고 있음. 반면 미국은 두 사건을 직접 거론하지 않은 채 "과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분명하고 일관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태도전환'을 강조하는 흐름이기 때문임.
- 정부 고위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진전되려면 기본적으로 북한이 '천안함연평도'라는 문지방을 넘어야 한다. 그래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함.
-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특별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우리는 모든 회담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고 그래야만 6자회담도 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대목임.
- 이에 비해 미국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의 사과가 전제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해야 만 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말했음.
- 토너 부대변인은 "외교적인 다음 단계 조치에 대해 얘기를 하려면 북한이 과거의 도발적 행동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분명하고도 일관된 태도, 건설적인 태도를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했음.
- 토너 부대변인의 발언은 큰 틀에서 과거 도발행위에 대한 '정리'의 의미도 없지 않지만 그보다는 앞으로 도발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전환'에 초점을 두고 있어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 이는 특히 한미 양국이 지난 16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배포한 공동 보도문에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 한다"고 밝힌 것과도 다소 다른 흐름임. 당시 당국자들은 이를 천안함연평도 문제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강조했었음.
- 이런 가운데 6자회담 주무부처인 외교당국은 "천안함연평도가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모호성 전략을 유지하면서 한미 간 보폭을 조율하는 모습임.
-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연평도 문제가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다"라며 "북한이 더 이상 도발 쪽으로 가지 말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 전진시키는 방향으로 진정성 있는 조치를 보여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했다.
- 이는 토너 부대변인이 "북한이 과거의 도발적 행동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분명하고도 일관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코드'가 일치하고 있음.
 - 조 대변인은 특히 "미국이 강조하는 것도 6자회담을 개최하려면 사전여건 조성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단어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와 행동이라는 것"이라면서 "모든 것이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귀결되는 것이어서 한미 간 입장에 아무런 차이나 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 외교부는 그러면서도 천안함·연평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화국면의 진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천안함·연평도 카드'를 살려놓으려고 하고 있음.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천안함·연평도 문제는 총론적인 대화국면 진전과정에서 살아있는 변수로 존속하겠지만 내용상으로는 비핵화 회담과는 분리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임.
 - 한 핵심당국자는 "천안함·연평도 이슈로 인해 비핵화 회담 자체에 지나치게 과부하가 걸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 **中 "현재 한반도정세 완화 기미 있다"(4/19)**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이 19일 "현재 한반도 정세가 완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관 각 측이 각급의 유리한 기회를 활용해 접촉을 강화하고 조기에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조건을 창조해가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추동하고 6자회담의 틀 안에서 9.19 공동성명의 각 항목을 실천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이 각 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특히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라는 목표를 위해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를 재개해야 하며 담판을 진행하면서 서로 신뢰를 쌓고 타당한 처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日 외상 "6자회담 재개 상황 아니다"(4/21)**
- 마쓰모토 다케이키(松本剛明) 일본 외무상은 20일 참의원(상원) 납치문제 특별위원회에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에 대해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케이키 외무상은,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거론했음.
 - 한편 나카노 간세이(中野寛成) 납치문제 담당상은 5월 중순에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관계 부처 부대신, 정무관 연락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中우다웨이 26일 전격방한..6자 재개 협의(4/22)

-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6자회담 재개 협의를 위해 오는 26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교소식통은 22일 "우 대표가 26일 서울을 방문해 최근 북중 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6자회담 재개 문제를 우리 측과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우 대표는 방한기간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하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예방할 예정이다.
- 우 대표는 지난주 북중 협의에서 우리 정부가 최초로 제안한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북미대화→6자회담'의 3단계안을 수용하면서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촉구했음.
- 우 대표는 3단계안을 토대로 남북 비핵화 회담을 포함한 구체적인 6자회담 재개방안을 우리 측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 미·북 관계

● 美, 대북제재 새 행정명령 발효(4/19)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시각)을 기해 대(對)북한 제재와 관련한 새 행정명령을 발효한다고 백악관이 18일 밝혔음.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발표 자료에서 "지난 2008년과 2010년 각각 발효된 행정명령 13466호와 13551호의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1718호, 1874호를 확인하는 동시에 무기수출통제법(AECA)에 규정된 수입 금지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효한다"고 밝혔음.
- 이날 발표된 행정명령에 따르면 북한의 상품, 서비스, 기술 등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미국으로의 수입이 전면 금지됨. 또 미국 내에서 혹은 미국 국민이 이 같은 명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하려고 시도하는 것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기 위한 음모도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제재를 받게 됨.
- 이번 행정명령은 아울러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효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지난해 추가된 행정명령 13551호도 유효하다고 밝혔음.
- 지난해 11월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발효된 행정명령 13551호는 기존에 미국인의 북한 선박 소유 및 보유, 운영 등을 금지한 13466호에 사치품 교역 및 돈세탁 금지 등의 조항을 추가한 것임.
- 오바마 대통령은 "재무장관이 국무장관과의 협의 아래 이 같은 조치에 나서도록 지시했다"면서 "미국 정부의 모든 기관은 이번 행정명령의 이행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 의장에게 이날 행정명령 내용을 동봉한 서한을 보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 발효에 대해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산 상품 서비스 등은 이미 미국에 수입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기존 규정의 허술한 부분을 보완하지는 취지에서 행정명령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도 기존의 대북제재에 새로운 조치를 추가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한 바 있음.

● **美 "행정명령, 기존 대북제재 연장선상"(4/20)**

- 미국 정부는 19일 북한 동방은행(뱅크 오브 이스트 랜드)을 추가 대북 제재대상 기관으로 지정한 것 등과 관련, "기존 제재의 연장선상"이라고 밝혔다.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이은 제재대상 추가 지정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무기수출통제법(AECA)에 따른 기존 제재의 연장으로 이해한다"면서 "이런 절차를 단순히 갱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토너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언급할 때 이는 엄청난 물량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난해 9천 달러 정도의 제품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산 수입 제품과 관련, 그는 구체적인 품목을 언급하지 않은 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1만 달러를 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법적으로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기존 제재를 진행하고 있고, 행정명령은 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美특사 "대북행정명령, 식량지원 결정에 영향 없어"(4/20)**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9일 미국의 새로운 대북행정명령이 대북식량지원 문제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킹 특사는 이날 연합뉴스를 비롯한 일부 언론과의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인터뷰에서 이날부터 발효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 행정명령과 관련, "이 행정명령이 식량지원 문제 결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미국의 인도적 지원은 지원 필요성과 가용 자원, 모니터링 문제 등에 기초해 이뤄진다면 아직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문제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계속 이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와 관련, 그는 "우리의 식량지원 결정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인도적 필요에 기반 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 그는 '한국이 대북 식량지원에 반대해도 미국이 독자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독자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했다.



- 그는 세계식량계획(WFP) 등이 내놓은 북한식량사정 조사 보고서를 계속 검토 중에 있으며, 한국 등 동맹국들과의 협의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 그는 이어 "일부 사람들은 이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북한이 농업시스템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전해의 폭이 매우 넓다"고 언급, 대북식량 지원 문제와 관련한 협의가 진통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 그는 식량지원 결정이 이뤄질 경우 북한 측과 마주앉아 모니터링 문제에 대해 협의할 방침임을 거듭 확인했다.
- 이 밖에 그는 또 북한의 식량사정을 직접 조사할 미 정부 대표단의 파견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고, 식량지원 결정을 '실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는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결정이 빨리 이뤄지는 것이 확실히 낫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 <카터 방북 한반도정세 '의외변수' 되나>(4/20)

- 오는 26일 방북 길에 오르는 지미 카터 전(前) 미국 대통령의 방북이 한반도 정세에 미묘한 변수로 떠오를 조짐임. 미국 정부는 순수한 개인차원의 방북이라고 선을 긋고 있으나 유동성 높은 현 정세 속에서는 의외의 '폭발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임.
-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대목은 카터 전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할 가능성임. 아이잘론 말리 곱즈씨 석방을 위해 방북했던 지난해 7월에는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 보임.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전직 국가수반 3명을 대동한 방북이어서 김 위원장이 면담에 응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더욱이 북한은 대화국면으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어 '카터 방북카드'를 키우려고 할 가능성이 큼. 김 위원장이 카터 전대통령과 면담을 활용해 국면전환을 노린 모종의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임.
- 물론 카터 전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소지한 특사자격은 아님. 그러나 김 위원장과 면담이 성사된다면 북한의 메시지를 서울과 워싱턴에 전달하는 메신저의 '모자'를 쓰게 됨. 특히 카터 전대통령은 방북 직후 베이징(北京)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임. 전국 국가수반들을 대동하는 그는 방북결과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면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큼.
- 이는 현재 대화국면에 응하면서도 원칙론을 고수하는 한미 정부에 난감한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음. 북한이 진전성 있는 태도변화를 보이기보다는 카터 전대통령 방북카드를 활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선전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정부 관계자들은 "현재로서는 카터 전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면담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면서 "카터 전대통령의 방북은 개인자격이며 정부 차원의 메시지를 갖고 가지 않는다"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음.



● <美 대북접근 전략은 민간분리 '투트랙'(4/20)>

-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문제에 접근하면서 민간과 당국을 철저히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양상을 보여 주목됨. 당국 간 관계는 여전히 비핵화나 도발중단 등 원칙을 엄격히 고수하는 반면 민간 교류에서는 비교적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음.
- 미 정부의 원칙적인 대북접근 스탠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일 오전 0시1분(미국 동부시각)을 기해 발효한 대북제재와 관련한 새 행정명령에서 잘 드러남.
- 이날 발표된 행정명령에 따르면 북한의 상품, 서비스, 기술 등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미국으로 수입이 금지되고, 미국 내에서 혹은 미 국민이 명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하려고 시도하는 것도 통제됨. 이는 2006년 북한의 핵실험에서 촉발된 대북제재의 연장선에 있는 조치로, 실효성은 적지만 미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접근'에 변함이 없음을 보여줌.
- 그러나 이러한 미 정부의 조치에도 민간교류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전개되는 양상이어서 눈길을 끄. 정우진 미국 '태권도타임스' 대표에 따르면 북한 태권도시범단의 입국 비자가 발급돼 내달 말부터 6월 초까지 선수와 지원인력을 포함해 17명으로 구성된 북한 태권도 시범단은 뉴욕과 보스턴 등 6개 도시를 돌며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학교 등을 찾아가 일반인에게 태권도를 가르칠 예정임.
- 북한의 태권도 대표단은 '2.13합의' 등으로 북미관계가 좋아지던 2007년 부시 행정부 때도 미국을 방문한 바 있어 이번 미 정부의 북한 태권도 대표단의 방미 허가는 변화하는 북미관계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옴.
- 앞서 북한 무역성 등의 국장급 인사로 구성된 경제대표단이 지난 3월 미 캘리포니아대학 산하 국제분쟁협력연구소 초청으로 13박14일 일정으로 방미해 반도체칩 제조업체인 쉘컴, 생명공학업체인 라이프테크놀로지스 등 산업현장 시찰과 세미나 등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의 경제를 배우고 돌아갔음.
- 또 북한 외무성의 리근 국장은 미국의 싱크탱크인 아스펜연구소의 초청으로 독일을 방문해 미국의 전직 고위관료들과 토론회를 갖고 대화와 협상으로 양국 간의 문제를 풀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음.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주축으로 한 과학자 대표단도 지난 2월에 이어 5월 또 방미해 양국 간 민간 차원의 과학·기술 교류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오는 26일부터는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이 전직 국가수반모임인 '엘더스 그룹(The Elder's Group)'의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 그로 할렘 브룬트란트 전 노르웨이 총리, 마르티 아티사리 전 핀란드 대통령 등과 함께 2박3일간 일정으로 방북길에 오름.
- 북한 대표단의 방미나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미 정부는 '민간 또는 개인 차원의 일로 설명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허가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교류를 당국 간 관계와 분리해 접근하는 미 당국의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을 내놓음.
- 이런 가운데 미 정부의 식량지원까지 재개되면 북미 간 민간교류는 그 어



느 때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미 정부가 2007년 지원되다 분배 투명성 문제로 중단한 식량 50만 중 33만의 지원 개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식량지원이 이뤄지면 미국 내 대북지원단체들이 대항하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커 보임.

-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9일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 행정명령과 관련, "이 행정명령이 식량지원 문제 결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한 것도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됨.

● 美재무부, 北은행 추가 제재 단행(4/20)

- 미국 재무부는 19일 재래식 무기 불법 거래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북한 은행 한 곳에 대해 추가 제재를 했다고 밝혔음.
- 미 재무부 데이비드 코언 테라금융담당 차관 대행은 이날 "뱅크오브이스 트랜드(동방은행)는 북한의 정보기관 및 이란의 은행과 연계돼 있는 재래식 무기 수출의 주요한 통로"라고 말했음.
- 이 은행은 북한 최고 정보기관의 지휘통제를 받는 그린 파인으로 불리는 무기 거래 기구를 도와온 혐의를 받고 있음.

다. 중북 관계

● 北대사, 최근 中최고위층 잇따라 면담(4/22)

-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가 최근 중국의 고위층과 잇따라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북한 2인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 준비 작업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22일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지 대사는 지난달 25일 자칭린(賈慶林)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에 이어 지난 7일 리창춘(李長春) 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잇 따라 면담했음.
- 지 대사는 또 지난달 하순과 이달 초순 관영통신 신화사의 리충권(李從軍) 사장,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장옌농(張研農) 사장, 차우(蔡武) 문화부장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음. 지 대사는 이어 지난 20일에는 명젠주(孟建柱)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을 만났음.
- 외교가에서는 자 주석과 리 상무위원이 중국의 집단지도체제에서 권력을 균점한 9명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고 신화사와 인민일보 사장은 문화부장과 마찬가지로 장관급 인물들로 일국의 대사가 이처럼 짧은 기간에 중국의 최고위층을 연이어 만났는데 주목하고 있음.
- 지 대사가 외국 수반의 방중 시 경호를 담당하는 공안 총책임자와의 회동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음. 특히 명젠주 국무위원은 지난 2월 13~15일 방북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해 김정은의 중국 방문을 요청하고 중국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의 권력 승계를 인정하는 발언을 한 인물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음.
-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명 국무위원이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정은



-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대돼 조선혁명의 계승문제가 빛나게 해결된 데 대해 열렬히 축하한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따라서 일각에서는 지 대사의 이런 행보가 김정은의 방중을 앞둔 사전 작업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외교가는 중국과 북한의 주요 지도자들의 내부일정으로 볼 때 김정은이 4월 말과 5월 초에 방중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음.
 - 북한은 이달 들어 지난 7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를 개최했고 15일 고(故)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25일 인민군 창건일을 거치면 사실상 주요 일정을 마치게 됨. 중국도 지난 12~14일 브릭스 정상회담과 14~16일 보아오 포럼이 종료됐고 다음달 1일 노동절 휴일을 빼면 큰 행사는 거의 없음.
 - 다만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방문하며 다음달 21~22일에는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한국중국일본 간 제4차 3국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임. 아울러 6월에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차 카자흐스탄을 방문해야 하고, 곧 바로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또 7월에는 중조 우호협력조약 서명 50주년 행사가 예정돼 있음. 그러나 이 조약의 일부 내용을 두고 양국 간에 마찰이 있다는 점에서 행사가 열리는 7월에 방중 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이 조약 내용 가운데 중국이 제3국의 침략 등으로 북한에 전쟁 상태가 발생할 경우 자동적으로 군사력을 개입할 의무가 규정돼 있으나 학계와 외교가에서는 이 조항이 사문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아울러 7월 1일은 중국 공산당 창당 90주년 기념일로 중국에 행사가 많을 뿐더러 7월 5일은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烏魯木齊)의 유혈사태 2주년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中, 카터 방북에 힘 실어주나>(4/24)

- 한반도의 위기 국면마다 '해결사' 역할을 자임해온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곧 방북길에 오를 예정인 가운데 중국이 카터 일행에 부쩍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임.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으로 향하는 카터 전 대통령과 마르티 아티사리 전 핀란드 대통령, 그로 브룬트란트 전 노르웨이 총리,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 등 엘더스(The Elders) 회원들의 동선에 주목하고 있다.
- 카터 일행은 베이징(24~25일)을 시작으로 평양(26~28일)과 서울(28~29일)을 거치는 3개국 순방 일정을 잡았음. 직항 노선이 없어 북한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베이징을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일반인과 달리 특별기편으로 얼마든지 북한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전직 국가원수들로 구성된 엘더스 회원들이 중국을 경유하는 데에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 수 있다고 외교 소식통들은 입을 모으고 있음.
- 6자회담 의장국이자 북한과 '혈맹'이라는 특수 관계를 맺은 중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북한과 접촉해 합의안을 이끌어낸 다음 이를 남한에 전달해 '대화의 선순환' 고리를 완성해보겠다는 카터 일행의 의도가 순방 일정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는 분석임.
 - 이런 차원에서 엘더스는 방북 시작을 하루 앞두고 25일 베이징에서 한반도 방문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평양을 거친 뒤 28일 서울에서 방북의 성과와 의미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했음. 이와 더불어 북한과 가장 잦은 접촉을 하는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북한의 최근 입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협상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카터 일행의 방북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런 의미에서 중국은 북한과 당 대 당 교류를 담당하는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비롯해 양제츠(楊潔篪),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 대북라인이 대거 나서 카터 일행을 면담하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됨.
 - 한 외교 소식통은 "카터 일행이 중국 고위 관료들을 만나 현재 북한의 입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은 어떤 형태의 대화도 환영한다는 입장이어서 엘더스 회원들을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음. 중국은 카터 일행을 만나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엘더스가 남북한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수행해달라는 바람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중국 측은 엘더스 회원들에게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이달 방중 때 이뤄진 북중 간의 최신 접촉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나름의 조언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라. 일·북 관계

● "北, 라선 방문 일본인 2명 구속"(4/20)

- 북한 당국이 지난달 라선을 방문한 일본인 3명 가운데 2명을 현재까지 구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아사히신문이 20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복수의 일본-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지난달 북동부 라선시에서 일본인 남성 3명을 구속했다가 한 명을 석방하고, 2명은 구속 중이라고 전했음.
- 북한 당국은 일본인을 국외로 마약을 밀수출하려 한 혐의로 구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음.
-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인 3명은 도쿄에 본사가 있는 기계 관리업체 사원으로, 라선의 식품업체로부터 기계 점검 의뢰를 받고 3월 초순 경제특구인 라선에 있는 공장을 방문했음. 구속된 일본인들은 라선의 공장에서 가공한 중국 수출 통조림에 마약 분말을 숨겨 넣은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음.
- 일본인 3명 가운데 풀려난 1명은 귀국했으며, 이미 일본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 당국에 구속돼 있는 2명 가운데 한 명은 40대 남성으로 도쿄에 거주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30대 남성으로 지바에 살고 있음. 북한 당국은 거액의 보석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북한의 공식 매체는 지금까지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고 있으나, 북한 당국은 이를 일본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음. 일본 정부는 북한이 마약 밀수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정치·외교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기로 했음.
- 북한은 지난 2003년 10월 일본인 남성을 마약밀수 혐의로 구속했다가 2009년 1월 '인도적 조치'로 출국을 허용한 바 있음.

● "日, 북한 위문금 10만 달러는 무시?"(4/24)

- 일본 외무성이 각국의 일본 재해 지원 현황을 정리하면서 유독 북한을 빼놓았다고 도쿄신문이 24일 보도했음.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자체 웹사이트(www.mofa.go.jp)의 첫 페이지 '동일본대지진 관련 정보' 중 '외국 등의 물자 지원·기부금 일람'이라는 곳에 각국이 보낸 지원품과 지원금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음.
- 지난 22일 현재 142개국지역과 39개 기관이 일본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미 101개국지역이 68억 엔(약 896억 원)과 물자를 보냈다는 내용임.
- 외무성은 미국, 중국, 한국 등 수교국은 물론 대만처럼 국교가 없는 나라의 지원 현황까지 상세하게 밝혀놓았음. 하지만 북한이 지난달 25일 허종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부의장을 통해 일본적십자사에 재해 위문금 10만 달러(약 1억 원)를 보냈다는 사실은 기재하지 않았음.
- 이에 대해 외무성 관계자는 "북한이 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했을 뿐 외무성에는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하지만 외교평론가인 아마키 나오토(天木直人)씨는 "외무성에 통지가 없으니까 리스트에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공무원 식의 경솔한 발상"이라며 "만약 북한이라서 정치적인 이유로 올리지 않았다면 잘못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 신문은 또 1991년 걸프전 당시 일본이 130억 달러(약 14조원)를 지원하고도 쿠웨이트가 감사의 뜻을 표명한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란을 벌인 사실을 거론하며 "북한의 지원을 '무시'했다면 배려심이 부족하다"고도 비판했음.

마. 기 타

● 러, 불법 카지노 임대 혐의 北 대사관에 항의 각서(4/20)

- 러시아 외교부가 모스크바의 주러 북한 대사관 역내에서 불법 카지노 시설이 운영된 혐의와 관련 김영재 북한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 각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앞서 주러 북한 대사관과 벨라루스 대사관 역내에서의 불법 카지노 운영 사실을 폭로했던 일간지 '이즈베스티야'는 19일 "전날 러시아 외교부가 주러 북한 대사와 벨라루스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 각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음.
- '3670/1da'라는 번호가 붙은 대(對) 북한 항의 각서에는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 역내에서 카지노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외교부로 입수됐다. 외교부는 카지노의 즉각적 폐쇄와 함께 (북한) 대사관이 향후 러시아 법률과 양자 협정 및 국제법 규정의 유사한 위반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신문은 소개했음.
- 신문은 벨라루스 대사에게도 항의 각서(번호 4219/2dcng)가 전달됐다고 "외교부 정보에 따르면 (벨라루스) 대사관 역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도박 시설이 불법으로 운영됐다. 러시아 측은 벨라루스 측이 빈 협정 조항에 어긋나는 이 같은 활동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간주 한다"는 각서 내용을 공개했음. 이즈베스티야는 그러면서 양국 대사가 항의 각서 전달 자리에서 대사관 역내에서의 카지노 운영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러시아의 유력 신문인 이즈베스티야는 앞서 14일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과 벨라루스 대사관 건물 일부가 불법 카지노 시설로 이용돼 왔다고 폭로했음. 2009년 7월 러시아 내 주요 도시에서의 카지노 영업을 금지한 연방법이 시행되면서 지하로 숨어든 카지노 업자들이 치외 법권 지역인 외국 공관을 불법 영업 장소로 이용했다는 것이었음. 그러면서 북한 대사관과 벨라루스 대사관 역내의 카지노 운영 실태를 상세히 소개했음.
- 보도에 따르면 모스크바 시내 서쪽 '모스필르모프스카야' 거리에 있는 북한 대사관의 한 건물 2, 3층이 지난해 12월부터 카지노장으로 이용돼 왔으며 러시아의 큰 사업가들이나 범죄 조직 관계자들이 카지노에 드나들었음. 이들 가운데는 하루 저녁에 10만 달러 이상을 뿌리는 고객도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북한 대사관이 카지노 업자들과 결탁해 도박장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음.
- 주러 북한 대사관은 그러나 언론 보도 후 즉각 "우리 대사관 역내에는 어떠한 카지노도 없으며 그 전에도 없었다"고 반박했음. 벨라루스 대사관도 대사가 직접 현지 주요 언론사 기자들을 불러 카지노 운영 의혹을 받은 건물을 보여주며 신문 보도를 반박했음.
- 하지만 이즈베스티야는 이날 보도에서 당시 벨라루스 대사는 기자들에게 카지노 시설이 있는 홀이 아닌 다른 홀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음.
- 신문은 이어 같은 날 주러 외국 공관 내 불법 카지노 실태와 고객 명단 및 연락처 등을 공개했던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한 곳이 해킹을 당했었다며 카지노의 단골 고객이었던 기업인, 쇼 비즈니스 관계자, 범죄조직 거물 등이 해킹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李대통령, 美상원 동아태소위원장 접견(4/18)**

-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짐 웹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민주당버지니아주)을 접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한 동맹으로 발전 중"이라며 "북한 문제에 대해 외교군사 전문가인 웹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계속 힘써 달라"고 당부했음.
- 이에 대해 웹 위원장은 "현 국제 정세에서 한미 관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 간 협력 강화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답했음. 웹 위원장은 한미 FTA에 대해 "경제적, 전략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이 협정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밝혔음.
- 웹 위원장은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상원의 대북규탄 결의안 통과를 주도했으며, 한미 FTA 조기 비준을 베팅 오바마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 **李대통령, 매코넬 美상원 공화당 대표 접견(4/19)**

-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미치 매코넬 미국 상원 공화당 대표를 포함한 상원의원 5명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어느 때보다 공고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미 의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협력을 해 달라"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이 대통령은 "한미 FTA가 경제적 실익과 한미 동맹 공고화를 위해 긴요하다"면서 "매코넬 대표를 포함한 공화당 지도부가 미 의회에서 조속한 비준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음.
- 이에 대해 매코넬 의원은 "한미 FTA를 지지하며, 비준 절차도 원활히 진행되길 희망 한다"면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관계의 하나인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 미 의회 차원에서도 각별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음.
- 오찬에는 매코넬 대표를 비롯해 마이크 조한스, 존 호브, 롭 포트먼, 제리 모란 상원의원과 정몽준 한미 의원외교협의회장,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 등이 참석했음.



● 美 'FTA 방한단', 27일 **李대통령** 예방(4/24)

- 게리 로크 미국 상무장관과 연방 하원의원 5명으로 구성된 방한단이 오는 27일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23일 미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 방한단은 사흘간(27~29일) 한국에 머무르며 정·관계 고위인사 면담, 한국 기업 및 병원 방문, 비무장지대(DMZ) 시찰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 이번 방한단에는 로크 장관과 함께 민주당 소속 찰스 랭글(뉴욕), 짐 맥더모트(워싱턴), 조지프 크롤리(뉴욕), 게리 피터스(미시간) 의원과 공화당 소속 데이비드 라이커트(워싱턴) 의원 등이 포함됐음. 특히 상무부는 이들 의원 가운데 4명이 한·미 FTA를 담당하는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이어서 이번 방한이 조속한 비준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방한단은 27일 첫 일정으로 이 대통령을 예방한 뒤 곧이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각각 회담하고, 한국 대학생들과 만남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또 28일에는 휴대전화 단말기 생산업체인 팬택을 찾을 예정이다. 팬택은 퀄컴의 칩셋과 코닝의 유리제품 등 한 해 약 5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한·미 FTA가 비준될 경우 수입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 로크 장관은 같은 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에서 연설을 통해 한·미 FTA가 양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 방한단은 마지막 날인 29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면담을 한 뒤 DMZ와 용산의 주한미군기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또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면담하고 미국산 의료기기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대 병원도 찾을 예정이다.
- 상무부는 DMZ와 주한미군기지 방문에 대해 "한·미 FTA가 미국의 전략적 동맹국인 한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무부는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한·미 FTA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을 한해 100억~110억 달러 늘리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방문은 '윈-윈 효과'를 부각시킴으로써 조속한 의회 비준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미 FTA와 관련, 최근 한국을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비준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으며,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의회의 심의 절차를 밟을 준비가 돼 있는 상태로, 현재 의원들과 기술적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한 바 있음.

● 카터, 방북직후 서울서 **외교·통일장관** 면담(4/24)

- 지미 카터 전(前) 미국 대통령이 오는 26~28일 방북을 마치고 서울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만날 것으로 알려



졌음.

- 24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국가수반급 모임인 엘더스그룹 회원 4명은 오는 28~29일 서울을 방문해 김 장관과 현 장관, 그리고 우리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날 계획임. 카터 전 대통령 일행은 외교·통일장관을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임.
- 엘더스그룹은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외교·통일장관과 위 본부장에 대한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음. 또 이명박 대통령은 엘더스그룹이 요청할 경우 전직 국가수반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카터 전 대통령 일행을 면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음.
- 카터 전 대통령 측은 28일 방북을 마치고 전용기편으로 서해 상공을 거쳐 서울로 내려오는 방안을 우리 정부와 협의하고 있음.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이 카터 전 대통령을 통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사과 등의 책임 있는 조치를 한다면 우리에게 직접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 한중 관계

● 김총리 "한중FTA, 취약분야 미칠 영향 준비해야"(4/19)

- 김황식 국무총리는 19일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제기하고 있다"면서 "농업 등 취약 분야의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세심하고 창의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 안보와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세심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그는 "국제사회에서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영향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 내부 갈등이 산재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 그는 "최근 일부 현안에 대해 의견 조율이 다소 미흡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예방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집권 후반기를 맞아 국정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내각이 서로 협의하고 역량을 결집해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제8차 한중 여성지도자포럼 26일 개최(4/19)

- 21C 한중교류협회는 오는 26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제8차 한중 여성지도자포럼'을 열 예정이다. 19일 협회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서는 한중 대졸 여성 취업문제의 현황과 전망, 한중 경제발전과 환경문제 등



이 주제로 다뤄짐.

- 중국 측에서는 장메이잉(張梅穎) 전국정치협상회의 부주석(부총리급)을 단장으로 차이진빠오(蔡金彪) 중국인민외교학회 부회장 등 16명이 참석함.
- 우리 측에서는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과 김한규 21C 한중교류협회 회장, 박은경 수자원협력 분야 대외직명대사,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함.
- 중국 대표단은 방한 기간 전두환 전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도 예방할 예정이라고 협회는 전했다. 21C 한중교류협회는 중국인민외교학회와 공동으로 양국 여성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여성지도자포럼을 서울과 베이징을 오가며 개최해 왔음.

다. 한일 관계

● 日 총리보좌관, 주일 대사에 후쿠시마 수습안 설명(4/18)

- 일본 측이 총리 보좌관을 주일 한국대사관에 보내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수습 방안을 설명했다.
- 18일 주일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호소노 고시(細野豪志) 일본 총리 보좌관이 이날 오후 3시께 권철현 대사를 방문해 도쿄전력이 17일 발표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단계별 수습 방안을 설명했고, "앞으로도 원전 사태 수습과 관련해 주요한 진전 사항이 있을 때마다 한국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 관련 정보를 신속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권 대사는 일본 측의 상세한 설명에 사의를 표했고, 한국 측 전문가 파견 등 한일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 日외무성, 한국 내 日도서 접근권 요청(4/19)

- 일본 외무성이 한국에 소장돼 있는 자국 도서에 대한 접근권을 요청해 우리 정부가 답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19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일본 외무성은 국사편찬위원회와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등 5개소에 분산 소장돼 있는 일본 도서와 자료의 수량과 종류를 파악해 한국 정부에 이들 자료에 대한 연구 목적의 접근을 요청했음.
- 현재 한국 내 일본 도서는 일본 중요문화재인 쓰시마종가문서(對馬宗家文書) 약 2만8천책과 '일제 주요기 도서' 약 5천책 등 모두 9만5천여 점에 달함. 이들 도서는 대부분 일본 조선총독부나 한국통감부가 입수했다가 한국에서 철수할 당시 남긴 것임.
- 외교 소식통은 "일본 자민당은 조선왕실의궤 등을 반환하는 반대급부로 한국에도 일본 도서의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외무성은 한국에 있는 일본 도서의 인도 요구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자료 접근만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17일 일본에서 유래한 도서 100여만 점이 한국에 보관돼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일제 강점기 시대의 도면과 토지대장, 개인정보기록 등을 모두 포함한 집계인 것으로 확인됐음.

● 日외상 "한일도서협정과 '한국 내 日도서'는 별개"(4/22)

- 조선왕실의궤 등을 한국에 돌려주는 '한일도서협정'을 비준하는 조건으로 '한국으로 건너간 일본 도서'도 돌려받아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일본 정부가 두 가지는 별개라는 견해를 밝혔음.
- 마쓰모토 다케이키(松本剛明) 일본 외무상은 22일 오전 중의원(하원) 외무위원회에서 "조선왕실의궤 등을 한국에 인도하는 것은 총리 담화에 근거한 자발적인 조치"라며 "한국에 있는 일본 도서를 이것과 동렬에 놓고 말할 수는 없다.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며, 어떻게 할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음.
- 마쓰모토 외상은 "나도 한국에 있는 일본 도서에 대해 애착을 느낀다"면서도 "일본 도서가 한국에 있는 것은 양국의 오랜 교류의 역사를 증명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덧붙였음.
- 이는 "조선왕실의궤만 일방적으로 한국에 줄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일본 문화재도 반환하라고 요구할 생각이 없느냐"는 오노데라 미쓰노리(小野寺五典) 자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음.
- 오노데라 의원은 "(일본) 정부가 1965년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국회 결의를 해서 돌려받겠다"고도 주장했음.
- 오노데라 의원은 또 한국의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가 22일 독도에서 전체회의를 열려다가 기상 악화로 연기한 사실을 거론하며 한일도서협정을 독도 문제와 연관시키라고 요구하기도 했지만 마쓰모토 외상은 별개 사안이라고 답변했음.

● 日 언론 "한일도서협정 곧 비준될 듯"(4/22)

- 일본 제2야당인 공명당이 한일도서협정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정기국회 회기 안에 비준될 공산이 커졌다고 마이니치신문 인터넷판이 22일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이노우에 요시히사(井上義久) 공명당 간사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일도서협정에 대해 "일한(한일)의 우호 교류를 위해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음.
- 이노우에 간사장은 "만장일치가 바람직하지만, 무리라면 실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표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음. 협정에 반대해온 제1야당 자민당도 일단 찬반 표결에는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 도서협정 비준은 수요일에 열리는 중의원 외무위원회, 화요일에 열리는 중의원 본회의, 화요일의 참의원(상원) 외교방위위원회, 월요일에 열리는 참의원 본회의를 거쳐야 함.



- 일본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협정을 제2야당인 공명당이 찬성하기로 함으로써 한일도서협정은 6월까지 열리는 정기국회 회기에 비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됨.

라. 미·중 관계

● 시진핑, 미 의회대표단에 '협력강조'(4/22)

-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21일 미국 의회 대표단을 만나 양국 간 협력을 강조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1일 보도했음.
- 차기 최고지도자로 유력시되는 시 부주석은 해리 레이드 상원의원을 단장으로 한 미 의회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미 의회의 참여와 지원이 없이는 중·미 관계가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그는 이어 "미 상원의원들이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양국 파트너십 형성에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면서 "중국은 미국과 정치적인 신뢰 향상과 상호 호혜증진, 그리고 국제문제에서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그는 그러면서 중국의 제12차 5개년개발계획(12.5 계획, 2011-2015년)을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양국이 클린 에너지와 인프라 건설, 경제무역 등의 분야에서 상호 투자 확대와 협력 강화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음.
- 시 부주석은 아울러 "양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지양하고 무역 분쟁을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적절하게 풀자"고 강조했다.
- 같은 날 우방귀(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미 의회 대표단을 만나 전인대와의 협력 강화를 주문했음.
- 우 위원장은 "미 의회와 전인대가 그동안 정례 교류를 통해 양국관계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높여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美中, 베이징서 '인권대화' 개최(4/22)

- 미국과 중국이 오는 27~28일 베이징(北京)에서 '인권대화(human rights talks)'를 개최함.
- 미 국무부는 22일 이런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번 대화의 주 의제는 중국의 반체제 인사 탄압이나 종교·집회의 자유, 종교인의 자유 제한 등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회담은 주로 최근 반체제 인사의 '강요된 실종'이나 비합법적 억류, 체포, 종교 및 표현의 자유, 노동권, 소수자들의 권리 등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는 미 국무부 민주·인권·노동담당 마이클 포스너 차관보가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 중동의 민주화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 지난 2월 중국에서 '재스민 시위' 조짐이 나타난 이후 중국 정부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민주화 운동가,



- 인권 변호사, 예술가들을 강도 높게 탄압하고 있어 이번 대화에서 미국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미국은 작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민주화 운동가 류샤오보(劉曉波)와 설치미술가 아이웨이웨이(艾未未)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이들의 석방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됨. 홍콩의 인권단체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최소 39명의 인권운동가와 변호사, 블로거 등이 구금됐으며 18명은 행적이 묘연한 상태임.
 -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문제 삼는 인사들이 중국의 법률을 어겼다는 논리를 펴며 맞설 것으로 예상돼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의법 국가로 어떤 사람도 헌법과 법 위에 있지 못하며 미국은 무책임한 발언을 멈추고 중국의 사법주권을 존중 해달라"고 강조했다.
 - 미국이 지난 8일 '201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인권 실태가 올해 들어 악화되는 부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자 중국은 '2010년 미국 인권기록'이라는 보고서를 내며 '너나 잘 해'식의 맞대응을 하기도 했음.
 - 2002년 처음 열린 미국과 중국의 인권대화는 2008년과 2010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로 양국 관계 부침에 따라 간헐적으로 열렸음.

마. 미·일 관계

● 日 총리실에 한때 미국 원전전문가 상주(4/21)

-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직후 일본 권력의 심장부인 총리 관저(총리실)에 한때 미국 원전 전문가가 상주하며 정보를 챙긴 사실이 밝혀졌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후쿠시마 원전 상황에 대한 미국과의 정보 교류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총리 관저라는 권력의 중추에 외국인을 받아들인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전했음.
-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원자력 공학 전문가 1명이 총리 관저에 주재한 시기는 3월 하순이었으며, 미국과 일본의 원전 공조팀이 발족하기 직전부터 팀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였음.
- 지난달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뒤 미국 정부는 상황 파악을 위해 총리 관저에 미국인 전문가가 상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본 측은 일단 거부했음. 하지만 사고 수습이 갈팡질팡하자 미국은 일본 정부의 대응과 정보 제공에 불만을 계속 표시했으며 총리실은 결국 미국 원전 전문가를 받아들였음.
- 총리실 내부에서는 미국이 총리실의 원전 수습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고 반대했지만 미국의 압박을 거부하기 어려웠음.
- 미-일 원전 공조팀 회의에는 지금까지 미국 측에서 그레고리 야스코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위원장, 패트릭 월시 태평양함대 사령관, 존 루스 주일 미국 대사가 출석하고 있고 일본 측에서는 호소노 고시(細野豪



志) 총리 보좌관,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전 방위성 정무관, 후쿠야마 테쓰로(福山哲郎) 관방부장관 등이 참석하고 있음.

- 지난달 22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미국 측이 '원자로 격납용기에 물을 채워야 한다'면서 격납 용기에 물을 넣어 내부 압력 용기를 생각하는 방법을 제안했음. 하지만 일본 측은 물의 무게 때문에 원자로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우려해 처음에 이를 수용하지 않다가 결국 냉각 시스템의 조기 회복이 어렵자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였음.

바. 중일 관계

● 日 "日 선박 들이받은 中 선장 불기소 부당"(4/19)

- 일본 검찰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인근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들이받은 중국 어선의 선장을 불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일본에서 나왔다고 산케이신문이 19일 보도했음.
- 나하(那覇)지검 검찰심사회는 18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던 중국인 선장 잔치승(詹其雄, 42)씨의 기소를 유예한 검찰에 대해 "불기소는 부당하다"고 의결했음. 심사회는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미즈키호'를 들이받은 데 대해 "가벼운 손상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고 비난했고, 기소를 유예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음.
- 또 해상보안청이 촬영한 충돌 시 비디오 영상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일본) 어선의 조업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디오를 공개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음. 이에 따라 나하지검은 재수사에 착수해야 함. 검찰이 또다시 불기소할 경우 검찰심사원 11명 중 8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기소 할 수 있음. 다만 잔치승 선장은 지난해 9월 중국으로 돌아간 만큼 실질적인 재판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잔치승 선장은 지난해 9월 7일 미즈키호를 일부러 들이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됐다가 같은달 25일 석방돼 중국으로 돌아갔음. 나하지검이 지난 1월 21일 잔치승 선장을 불기소 처분하자 같은달말 지바현에 거주하는 언론인 등이 나하지검 검찰심사회에 이의신청을 했음.

● 日총리, 中매체에 원전사고 해명 기고문(4/21)

- 일본 간 나오토(菅 直人) 총리는 21일자 환구시보(環球時報),新京보(新京報) 등 중국매체에 일본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중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시하고 원자력 발전소 사고 처리 진전과정을 해명하는 기고문을 보냈음.
- 간 총리는 '일본은 부흥과 신생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제목의 이 기고문에서 중국정부와 국민이 일본 재해 직후 신속히 지원의 손을 내밀어 준데 대해 일본국민을 대표해 감사를 표시한다면서 이번 일로 일본은 "환난을 당해 비로소 진정한 정을 느끼게 됐다"는 말의 의미를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고 밝혔음.



- 그는 또 "영원한 이웃인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보여준 뜨거운 관심 덕에 상당수 일본국민은 많은 위로를 느끼고 큰 격려를 받았다"며 재차 고마움을 표시했음.
- 간 총리는 "일본 후쿠시마에서 국제원자력 사고 등급 상 가장 심각한 사고를 일으킨데 대해 커다란 유감을 느낀다"면서 "사태 조기 수습을 위해 일선에 나서 지휘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 역시 거국적으로 전력을 다해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 그는 "내국민뿐 아니라 해외 여러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시시각각 발생하는 변화 상황을 포함해 원전 사고와 관련된 소식을 매우 투명하게 지속적으로 공개 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 방사성 물질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간 총리는 원자력 사고 발생과 처리과정에 대해 "이번 원전사고 진행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소식과 교훈을 전 세계와 공유기로 결심했다"면서 "아울러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 문제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 필요성을 감안해 청정 에너지 개발과 이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그는 "일본이 다시 국제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국가로 일어서게 국제사회가 보여준 '견고한 유대'와 '깊고 두터운 우정'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며 반드시 복구와 재건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음.
- 간 총리가 중국 매체에 기고문을 보낸 것은 지난 16, 17일 미국 매체들에 기고문을 보내 일본 핵물질 누출사고 진전과정과 재해복구 문제를 해명한 데 이은 것임. 당시 중국 일각에서는 간 총리가 미국 매체들만을 상대로 해명한테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었음.

사. 기 타

● "한중일 FTA' 공동연구 조기종료 합의"(4/24)

- 한국과 중국, 일본 통상장관이 일본에서 만나 내년 3국 정상회담 전까지 끝내기로 한 3국 자유무역협정(FTA) 공동 연구 종료 시기를 앞당기자고 입을 모았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일본 경제산업상,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은 24일 오전 도쿄 오후라 호텔에서 제8차 3국 통상장관 회의를 열었음.
- 3국 통상장관은 회의 후 "원자력 안전 분야의 3국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며,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산 부품소재의 공급 차질 때문에 역내 무역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 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 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측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과 중국이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후 일본산 농식품 수입을 규제한 것과 관련해 개선을 요청했지만, 한국과 중국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여서 쉽지 않다"며 난색을 보였음.



- 3국 통상장관은 또 안전사고 시 3국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원칙적인 수준에서 의견을 같이했음. 공통 관심사항인 3국 FTA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시작한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시기를 좀 더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관계자는 "내년 3국 정상회담 직전까지 공동 연구를 끝낼 예정이었지만, 이를 좀 더 앞당기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 하지만 이미 연구를 끝낸 한중, 한일 등 양국 간 FTA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3국 FTA 체결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임.
- 한국과 중국은 이날 3국 장관회의와 함께 열린 양국 비공식회의에서 중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양국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음. 일본도 한일 FTA 협상을 조기에 개시하자고 촉구하는 등 유럽연합(EU), 미국과 먼저 FTA를 체결한 한국을 상대로 중일 양국이 'FTA 구애'를 하는 모양새임.
- 3국은 또 양국 간 투자협정을 3국 투자협정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지만, 중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